

북한의 「남조선사회변혁운동」전략노선 평가

홍 승 길*

◁ 目 次 ▷	
I. 서 론	Ⅲ. 특징분석
II.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이론 개요	Ⅳ. 평 가
	V. 결 론

I. 서 론

북한은 1995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남전략의 이론을 수정하여 종래의 “남조선혁명”전략 대신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이른바 “남조선사회변혁운동”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대남전략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있는 우리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남북분단 이후 40여년만에 “식민지 반(半)봉건적사회”라는 종래의 관점을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기초하여 대남전략의 노선도 지금까지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 서울신문 비상임위원

혁명”을 새롭게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으로 수정하여 재정립하였다.

북한은 이와같이 재정립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노선의 이론내용을 1995년 전반기중 대남전용방송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2차례로 나누어 총 84회에 걸친 특강형식으로 한국사회에 전파시킨 바 있다.

특히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노선은 시기상 김일성 사망 이후에 제시된 점으로 볼 때 공식출범을 앞둔 김정일체제가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대남전략노선으로 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이에 평양방송 특강내용을 종합하여 북한의 새로운 대남전략노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이론의 내용을 개괄해 보고, 그 특징을 지금까지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과 비교 분석한 후, 수정하게 된 배경과 전략의 의미를 평가해 본다.

II.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이론 개요

1. 남조선사회의 성격

북한이 우리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떠한 각도에서 그리고 어느만큼 사실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들 대남전략노선의 적합성과 방향은 물론 현실타당성 및 효율성을 기본적으로 좌우하게 된다.

북한은 이번 “남조선사회변혁운동” 즉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노선을 정립함에 있어 그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전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치·군사 등 제반분야에서의 특수관계를 목적의식적이고 자기합리화적인 시각에서 평가한데 따라 우리사회의 성격을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식민지사회”라고 단정하여 종래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에서와 같은 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반봉건적사회”라는 관점은 이번에 자본주의사회로는 변경시켰으며 “사회구조 전반이 예측화되고 식민화된 자본주의사회이자 사회운동과정의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이므로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가 아닌 “반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평가의 근거로서 정치적으로는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밀착된 정상적인 자본주의나라의 권력구조와는 달리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통치권을 정점으로 하고 그 밑에 쫓소집권자와 예측독점자본가들이 앞잡이로 제후하고 있는 사회”라는 주장 등이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매판자본의 비대화와 민족산업의 파탄에 따른 기업활동의 기형화” 등을,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군사적 자주권과 방위력을 박탈당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구조와 면모가 미비한 실정” 등을 우리사회를 “반자본주의사회”라고 평가하는 근거로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적 성격”과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함께 하는 2중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2개 성격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의 해결과제 내지 임무와 함께 전략개념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식민지적 성격과 반자본주의적 성격은 각기 독자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불가분리의 관계이며…이중에서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된 성격은 식민지적 성격이고 반자본주의적 성격은 식민지적 성격에 의해 규제되는 부수적인 성격”이라고 하여 그 상호관계를 주종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이상과 같이 변경시킨 데 따라 대남혁명전략노선을 이른바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으로 재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의 성격

북한은 변혁운동(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로 “매개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를 들어 종래의 견해를 계속 견지하면서, 이번 새롭게 성격규정요소인 혁명의 기본임무와 사회계

급적 제관계를 파악·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의 선(線)”을 그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혁명의 기본임무를 “자주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변혁의 과정”으로, 그리고 사회계급적 제관계를 “자주성을 유린하는 계급과 유린당하는 계급 사이의 적대적인 대치관계”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의 변혁운동이론에서는 특히 “자주성”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가운데 물질적 요인보다 사상·정치적 요인을 크게 중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의 성격 또한 이상의 기본관점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바, 성격규정의 한요소인 현단계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팽소통치체제 파괴”→“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사회의 자주화 실현”→“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 달성”이라는 사회변혁의 한 과정을 임무로 제시하면서 이와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종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민지문제와 관련된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아야 할 민족해방의 과제”와 동시에 반자본주의와 관련된 “반동관료배·매관자본가·지주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참다운 주인이 되는 새사회를 세워야 할 민주주의적 변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현단계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과제를 제시하는 가운데 정권쟁취 즉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노골적으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변혁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또다른 하나의 요소인 한국내의 사회계급적 제관계와 관련해서는 “미제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반동관료배·매관자본가·지주들을 한편으로 하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둘사이의 모순”을 주장하여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엉켜있는 관계”로 종래와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임무의 측면으로 보든, 사회계급적 제관계의 측면으로 보든 공히 대외관계상의 민족적 문제와 대내관계상의 계급적 문제라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북한은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변혁운동과 민주주의적 변혁운동이 통일적으로 체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민족자주변혁”과 “대중해방변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족자주” 즉 “민족해방변혁운동”과 “대중해방” 즉 “민주주의적 변혁운동”간의 상호관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민족해방변혁운동”을 남조선사회에 대한 변혁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원천을 규제하고 그 과정을 규제하며 또한 그 결과를 규제하는 기본임무”로 절대시하면서 변혁운동의 “본질문제”로까지 중요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따라 민족해방변혁과 민주주의변혁간의 관계를 “민족해방위업의 쟁취는 남조선 변혁운동의 근본적인 과제이며…여기에 비하면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는 종속적 과제”라는 주종관계의 개념으로 변화·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략수행면에 있어서도 “남조선변혁운동은 민족해방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변혁운동발전의 합법칙적 로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성이 아니고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해결”, “민족해방의 과제가 수행되면 민주주의적 변혁과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용이하게 해결” 등과 같이 선후차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민족해방변혁과제”와 “민주주의적 변혁과제”간의 관계를 주종적이고 선후적인것으로 설정함에 따라 북한은 “남조선 변혁운동은 일정한 기간을 걸치는 역사적 시기를 필요로 한다”는 변혁운동의 소요기간과 관련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대남혁명을 일시적 혁명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혁명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변혁운동을 영도하는 계급으로서의 여전히 노동계급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변혁운동을 통해 수립하게 될 정권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권의 명칭을 “자주적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정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구성적 측면에서는 “외세와 그 주구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는 각

계각층인민들, 민족자주세력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광범한 민족자주세력의 통일전선 정권”이라고 하여 외세와 민족자주세력을 대칭시켜 부각시키면서 역시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지면서 노동계급의 영도를 받는 정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권의 성격중 기능적 정책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단지 추구해나갈 정책으로서 “자주권 견지, 식민지통치잔재 청산 및 민주주의적 변혁 실현, 자주 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한 투쟁” 등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종래와는 달리 이러한 정책사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나아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행기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3. 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

북한은 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 즉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제시하여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가 아니면 그것을 반대해 나서는가”에 따라 투쟁에 나서는 세력을 아군인 동력으로, 반대해 나서는 세력을 적군인 타도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또한 보는 바와 같이 자주성을 구분의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남조선변혁운동에 있어서의 대상을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하고 있는 반동관료배·매관자본가·지주”로 하면서 이 가운데 “주되는 투쟁대상”으로서 미국을 지목하고 있어 종래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변혁운동의 동력에 있어서는 “노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해서 청년학생·지식인·도시소자산계급·도시민민·애국적 민족자본가·애국적 군인·양심적 종교인”을 동력으로 삼음으로써 도시민민층과 종교계층을 새로 추가시키고 있다. 또한 “기본동력”에 있어서 “기술 및 정신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계급과 농민 그리고 청년학생과 양심적 지식인”으로 하여 종래와는 달리 노동계급을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기술 및 정신노동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청년학생과 지식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두 그룹

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4. 전략·전술

가. 목 표

북한은 변혁운동의 목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 실현”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것을 “전취목표”로, 그리고 맞지않고 방해가 되는 것을 “타격목표”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남조선 변혁운동에서의 “전취목표”는 다시 “주목표”로서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과 사회의 자주화”를, 그리고 “보조목표”로서 “사회 정치생활의 민주화 달성”을 설정하여 추구하고 있다.

또한 “타격목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목표”를 역시 “미제침략자들과 그들이 세워 놓은 식민지통치제도”로, 그리고 “보조목표”를 “팻쇼집권배들과 그들이 틀어쥐고 있는 팻쇼독재정권”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급투쟁과 관련된 반지주 반매관투쟁문제는 “이를 당면목표로 하여 전략적 주선에 내세워서는 안되며…민족해방변혁과제가 수행된 다음에 제기할 전략적 목표”라고 하여 선 민족해방후 계급해방 방침아래 이를 추후과제로 미루는 한편 우선 당면하게는 “자주적민주정권 수립” 즉 정권쟁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수단 :역량 편성

남조선변혁운동의 수행을 위한 역량편성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주력군과 보조역량의 편성 및 배치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 소위 주력군은 앞에서 기술한 「다」항 「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동력”으로, 그리고 “보조역량”은 기본동력을 제외한 여타의 동력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강력한 “주력군”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일사상

체계의 혁명적 정당 및 혁명적인 대중단체의 건설”과 더불어 이번 새롭게 “계급별·계층별 군중투쟁의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 변혁운동의 방법

변혁운동의 방법이란 변혁역량을 준비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문제를 의미하고 있다.

변혁운동의 준비기 즉 변혁역량을 마련하고 주·객관적 조건을 조성해나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우선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이미 조성해 놓은 변혁역량의 보호·보전 그리고 새로운 변혁역량의 축적·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합법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결합, 대·소규모투쟁을 상호 배합, 주권전취 목적의 정치투쟁과 생존권리 위한 경제투쟁을 결합시키면서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등 투쟁형태의 올바른 선택은 물론 각종 투쟁형태의 적극적인 배합을 요구하면서 모든 각종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유도코자 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같은 변혁운동의 준비기를 거쳐 “준비육성된 변혁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동세력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시기”라고 하는 변혁운동의 마지막 단계인 “결정적 시기”에 돌입해 간다는 전략구상이다.

Ⅲ. 특징분석

북한은 이번 기존의 대남전략이론을 수정함에 있어 우선 대남전략에 대한 지칭을 종래의 “남조선혁명투쟁”에서 “남조선사회변혁운동”으로 바꿈으로써 용어상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거부감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과격이 미지를 탈색·순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남적화전략용어를 “사회변혁운동”으로 순화시킴으로써 특히 개혁이 현재 한국사회발전의 주류

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변혁”은 곧 “개혁”이라는 등식으로 오인되어 큰 혼란을 야기케 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 또한 이를 겨냥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북한은 정치·경제·군사 등 제반분야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긴밀한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고 있는 사실을 두고 계속하여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정해 왔던 “반봉건적사회”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산업구조면에 있어서도 농업의 비중이 격감하고 2, 3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게 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사회”로 그 관점을 변화시켰으며, “사회구조 전반의 예측화 식민지화”와 “사회운동과정의 기형화 불구화”라는 자의적 내지 목적의식적인 평가에 따라 온전한 자본주의사회가 아닌 “반(半)자본주의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와같은 규정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반증시키면서 민족통일의 주체로서 행세할 수 있는 구실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식민지 등으로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왜곡한 것으로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로정하고 있는 바, 한국사회에 대한 성격규정문제는 그들의 대남전략노선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전제이자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사회가 “식민지 반봉건적사회”에서 발전하여 그들이 역사발전의 “합법칙적로정”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수행해 온 대남전략의 1단계 목표였던 “인민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반자본주의사회”로 변화한 사실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가 식민지 반봉건적사회로부터 “합법칙적로정”대로의 인민민주주의사회가 아닌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변화했다면 이는 곧 그들 역사발전관의 오류임과 동시에 대남전략상의 차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화현상을 “역사의 외도” “자기발전의 우회로에로의 진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들의 오류와 차질을 숨기려 하면서, 오히려 “식민지 반봉건사회와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는 상호근친성을 띠고 있는 사회”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남전략의 기초상 변화는

불필요하다는 개념정립의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가 인민민주주의사회가 아닌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변칙발전하게 된 원인을 “남조선내 주체적 혁명역량의 미비”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자본주의화방침 강행”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칙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한국사회의 이른바 “역사의 외도”를 정상적인 역사발전의 “합법칙적인 로정”으로 유도해 나가는 변혁운동에 있어 요구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어서 하는지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이론에서는 내용전반에 걸쳐 이른바 “자주성”을 논리정립의 기본준거로 설정하고 있는 사실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기준으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를 설정하고 사회계급적 제관계를 판단하여 이에따라 변혁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주성 실현투쟁” 및 “자주적 요구실현”에 대한 태도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을 구분하는 동시전취목표와 타격목표를 가르는 등 변혁운동이론 전반에 걸쳐 자주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종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이 “남조선사회의 식민지 반봉건적성격과 계급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의 대상을 구분하던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대남전략의 이론을 이른바 “인류사회의 발전역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라는 “주체사상”의 역사발전관에 입각하여 정형화시키려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자주성은 민족의 해방과 계급의 해방 양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통념상 민족의 해방측면 곧 한·미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며, 또한 표현상으로도 “해방”보다는 “자주”가 거부감을 줄이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남전략노선상으로 검토해 볼 때 먼저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의 성격에 있어서는 종래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성격을 “민족

해방 민주주의변혁”이란 성격으로 바꾸어 규정을 하였으나 “인민민주주의”란 지칭을 “민주주의”로 변경시킨 데 불과하며 그 지니고 있는 정신과 의미는 동일하다.

우선 변혁운동의 동력면에서 볼 때 “인민민주주의혁명”이나 “민주주의 변혁” 공히 노동계급을 영도계급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의 자주성을 요구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력으로 개념짓고 있다. 또한 변혁운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역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제민족해방과업”과 “민주주의적과업”의 2개 과업을 제시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때려 부수고” “사회의 자주화”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추구하는 목표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리고 그 담당세력까지 변경시키지 않고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변혁(혹은 민주개혁, 사회개혁)의 성격여하는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이 지향해 나가는 이념과 체제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혁명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요소이나 그 구체적 내용을 현재까지는 거론치 않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규정하여 공언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에서는 지주소유의 토지 몰수, 산업의 국유화, 8시간노동제, 남녀평등 등 사회주의화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해 왔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한국사회의 성격을 “반봉건적사회”에서 “반자본주의사회”로 수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남전략노선의 성격도 변화시켰다고는 하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명칭만을 “민주주의” “변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대남전략노선의 성격은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노선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중의 하나는 “민족해방변혁운동”과 “민주주의변혁운동”간의 상호관계를 새로이 조정해 놓은 사실이다.

북한은 “민족해방변혁”을 “민주주의적변혁”에 우선하는 남조선변혁운동

의 “본질문제”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서 “남조선혁명의 첫째과업은…민족해방을 이룩하는 것이며, 또하나의 과업은…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여 민족해방과업과 반봉건적 민주주의과업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던 관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의 “남조선혁명의 반제적 과업과 반봉건적 과업은 서로 의존하면서 다른 과업의 해결을 제약하고 촉진하는 관계” 즉 2가지 과제 간 상호보완적 관계의 개념을 조정하여 主민족해방변혁·從민주주의변혁이라는 주종관계의 개념으로 변화·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이 2가지의 혁명과업을 유기적으로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동시수행방침 역시 先민족해방변혁·後민주주의변혁의 선후시차를 둔 수행방침으로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민족해방변혁의 중시와 선차적 수행방침은 민족해방변혁이 한·미안보협력관계의 단절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철수 등 통일의 이른바 “비평화적 전도”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안을 둔 것이며, 그리고 민주주의적변혁이 계급혁명과 사회주의화추진 등 “평화적 전도”를 주로 겨냥한 과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단계 즉 공식출범을 앞둔 김정일정권이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대남전략은 “평화적 전도”보다는 “비평화적 전도”를 상정하고 그 여건 조성에 주력해 나가려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사회주의화를 위한 계급해방 등 민주주의적 변혁의 수행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민족해방변혁운동과 분리시키거나 배치시키지 말 것”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와 현 발전단계를 고려한다면 “남조선은 본질상 미제의 식민지이며, 지주와 대관자본가들은 실제적인 권력을 틀어쥐고 남조선을 좌지우지하는 주되는 사회정치세력이 아니다”라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 민주주의적변혁은 민족해방변혁에 비해 종속적이고 후차적인 과제로 된다는 주장을 펴는 가운데 사회주의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거론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아래 종래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공공연히 규정하였던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명칭대신 이른바 “근로인민대중

이 참다운 주인이 되는 새 사회 건설”이라는 미명을 내세운 “민주주의변혁”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변혁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위업”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과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일단 공산주의혁명기도를 은폐시키는 가운데 「사회주의변혁 일단 후퇴·민족해방변혁 집주」라는 당면 전략방침에 입각하여 남조선 변혁운동의 “방향 설정과 속도 조절에서 오류를 막고, 모든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함으로써 국내 NL과와 PD파간의 노선갈등과 같은 현상 등을 사전 제어하고 반미관련 투쟁에 전력투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난 1990년 8월 김일성이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남북한 국력경쟁에서의 패배자인 국면 등 내외적 혁명정세의 회복불가능한 퇴조기적 상황에 대처하여 당면기본대남전략노선으로 제시한 “온 민족의 광범한 통일전선 형성” 즉 민족대통일전선전략의 전개를 위해 “변혁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부단히 높이면서 변혁역량도 더욱 튼튼히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주의화문제 자체에 대한 공개적 거론의 회피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민주주의적 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과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1980년 10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시를 계기로 연방제의 의미를 통일을 위한 “과도적 대책”으로서라기 보다는 일단 완성형 통일국가로 상정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주목하여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제 역시 이에 대한 북한의 기본관점은 “남조선 인민들을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두리에 모아 통일투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중요조건”인 남북한합작 특히 정치적 합작의 “높은 형태”내지 “전면적인 합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북한은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의 기간 즉 변혁운동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성문제를 전혀 없이 이번 새롭게 제기하여 “남조선 변혁운동은 일정한 기간에 걸친 역사적 시기를 요한다”라고 밝힘으로써 변혁운동의 수행과 그 달

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또한 주목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남조선사회변혁운동발전의 합법칙적인 로정”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민족해방변혁과 민주주의적 변혁간의 상호 주종 및 선후관계로 볼 때 2가지 과제의 해결 곧 남조선변혁은 “동시적 해결이 아닌 일정한 시차를 갖고 해결되는 과제”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로 시차성을 띠고 수행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계급해방을 비롯한 사회주의화추진문제로서의 민주주의적변혁과업을 차요시(次要視)하거나 일단 후퇴시킴과 아울러 남조선 변혁운동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걸쳐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변혁의 중·장기화까지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새삼스럽게 고려 내지 인식하는 가운데 공론화함으로써 대남전략의 수행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자각의식을 들어내고 있다.

“남조선사회변혁운동”전략의 특징은 또한 정권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대남전략을 수행하여 쟁취할 정권의 명칭을 “인민민주주의 정권”에서 “자주적민주정권”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정권쟁취를 노골적으로 전면화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에서 “...결정적 시기를 준비있게 맞이...구경은...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여 정권쟁취문제를 대남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도 “기본임무”사항으로서의 직설적 표현을 피하고 단지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과 같은 함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제시하던 태도와는 매우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남전략이론을 수정함에 있어 정권쟁취가 전제되면서 “사회제도의 근본적 교체”를 의미한다는 “혁명”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경제관계의 단순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해 온 “사회변혁”으로 대남전략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변혁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극렬한 정권쟁취투쟁을 고취시켜 나

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을 “지배세력과의 힘의 대결이자 판가리 싸움”으로 의미짓고 있다.

또한 정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구성적 측면에서는 역시 통일전선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에 참여할 통일전선의 세력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종래와는 달리 “노동자, 농민, 애국청년학생...”식으로 참여할 각계각층을 적시하지 않고, “외세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민족자주세력”으로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정권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정권에서와는 달리 개략적인 정책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민민주주의정권에서는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 곧 “지주, 매관자본가,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독재실시”문제와 그리고 사회주의의 과도적 정권 곧 “사회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조건을 마련하는 정권”이라는 분명한 기능을 밝혔었다. 그러나 자주적 민주정권에서는 명시적인 기능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수행해 나갈 정책으로서 “자주권 견지, 식민지잔재 청산 및 민주주의적 변혁 실현, 자주 평화적 통일실현투쟁”을 포괄적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화 문제의 거론을 자제하면서 민주주의적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기능문제의 명시화는 물론 정책의 구체적 표현도 당연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제시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론해 볼 때 “자주적 민주정권”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고, 북한공산주의가 우리사회에 대해 추구하는 근본적인 변혁란 곧 사회주의화 밖에 달리 될 수가 없으며 사회주의화는 바로 인민민주주의정권의 명시화된 기능인 것이다.

결국 “자주적민주정권”은 기본성격상 “인민민주주의정권”과 동일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적 측면의 성격을 포괄적 의미의 표현으로, 그리고 기능적 측면의 성격을 개념적 의미의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정권의 명칭을 “인민민주주의정권”에서 “자주적민주정권”으로 변경한 것은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정권으로 주지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정권”추구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기피·거부의를 불식시키면서 당면 기본대남전략노선인 민족대통일전선전략의 수행여건을 호전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이론에서 이밖에 주목되고 있는 특징은 변혁운동의 동력을 종래의 노동계급과 농민, 지식인, 애국적 군인,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에 더하여 우리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파생된 도시빈민층과 80년대 이후 대북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종교계층을 추가하고,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계급과 계층의 참가”를 주장하면서 민족대통일전선 전략에 부응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민주화 실현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변혁운동이 쟁취해야 할 “보조적 전취목표”로는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전의 “당면한 주요 투쟁과업”으로 비중을 두어 추구하던 태도와는 달리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안전기획부 폐지 등 형식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어, 과거 대남전략을 수행하면서 주요 역용공간으로 활용해 왔던 “민주화투쟁 공간”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착으로 소실됨으로써 대남전략수행을 위한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적들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튼튼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함”을 강조하여 변혁운동이론에서도 역시 폭력투쟁방침을 의연히 견지하고 있는 사실을 들겠다.

광의적인 공권력을 의미하는 반(反)혁명적 폭력을 “계급적 대립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착취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오직 혁명적 폭력에 의해서만 타승이 가능하다”는 논리 아래 폭력활동을 정당화하면서 하시라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폭력투쟁을 “특수한 형태의 정치투쟁”으로 규정하여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면서 고무해 오고 있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정권을 쟁취하는 “가장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 그리고 혁명의 준비기에는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고무적인 역할을 하며…힘있는 작용”으로 혁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폭력투쟁이 작용하는 역할을 매우 중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혁운동수행과 관련한 현 한국내정세에 대해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생산수단을 유린·박탈당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여 변혁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양호”하며, 객관적 정세 또한 경제적 위기 심화와

대정부불만 고조 등을 거론하면서 “ 좋게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변혁역량이 “미흡”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IV. 평 가

북한은 실로 40여년 만에 우리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남전략노선을 재정립·제시하였다.

우리사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수립할 대남전략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회실상을 사실대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전분야에 걸쳐 의도적으로 실상을 왜곡하면서 대남전략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관계에서 자신들의 주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사회의 “질적변화”를 인정하여 봉건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립한 전략이론이 그들이 수정한 한국사회의 성격규정에 부응할 만큼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없이 대남전략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과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구도 자체도 역시 대동소이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지 과거의 용어상에서 나타나고 있던 노골성을 은폐하고 과격성을 순화시키는 데 주안을 두면서 일부 내용만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전략입장은 현재 그들의 혁명역량상으로 볼 때 우선 그간 역주해온 남북한간 국력경쟁의 결과가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까지 다다른 대내혁명역량의 위축은 물론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국제적 고립에 따라 초래된 국제혁명역량기반의 와해 등으로 이른바 3대혁명역량을 기축으로 한 대남전략의 기초 자체가 무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립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차원이 아닌 대결과 투쟁차원의 전략개념을 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시된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은 막다른 궁지에 처하고 있는 전략환경하에서 필사적으로 구사해 보려는 최후의 대결적 차원의 전략노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단계에서 북한은 “민족해방변혁” 수행에 최우선을 두어 “민주주의적 변혁”을 차요시하고 변혁운동기간의 중·장기화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한·미안보협력문제의 해결에 전력투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대남통일전선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의 “반파쇼민주주의전선”을 한국사회의 상황변화 즉 “오늘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부터 반외세자주화의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민족해방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려 나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 섰다”는 정세평가에 기초하여 “민족해방과제의 완결”에 초점을 맞춘 “민족민주주의전선”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변혁”을 차요시하여 사회주의화문제의 공개적인 제기를 금지시키면서 민주주의적과제를 변혁운동이 해결해야 할 종속적 과제로 설정한 것은 전략적 차원의 고려에서라기 보다는 역사적 현실차원에서의 불가피성이 보다 근본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전략적인 차원에서 민족해방과업의 우선적 해결에 전력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민족대통일전선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활로개척의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현실면에서 볼 때 90년 이후 민족대통일전선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축되었던 혁명여건이 이제는 통일전선전략의 전개 자체마저도 어려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론과 체제가 주장하던 그 자체의 당위성은 이미 상실되고 사회주의는 이제 지나간 역사속에 하나의 사실로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구조 역시 중산층의 대거 확충, 재산소유권의 분산 등으로 사회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급격히 소실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실정과 추세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사회에서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일단 후퇴시키게 한 실질적인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냉엄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와같은 사회주의의 당위성 상실이라는 실정과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주의 적용기반의 약화추세가 장차 확고한 현실로 발전 정착될 경우, 역사적 현실은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수정까지도 강요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국면으로 변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북한은 예견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무관하지 않게 북한은 변혁운동에 소요되는 시간 즉 변혁운동기간의 중·장기화를 굳이 상정하면서 일정기간에 걸쳐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변혁운동의 수행이 요구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혁명역량의 열세에 더하여 우리한국의 민주화 정착 및 사회 경제적 선진화, 북한 사회의 체제일탈현상 만연·경제적 궁핍 가중·대남패배의식 확산 등 절대적인 취약화, 국제적 고립의 심화 등 주객관적 혁명정세마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혁명의 이른바 퇴조기적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기간을 변혁역량을 육성하고 축적하는 시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나, 변혁운동의 중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중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대해 군사적 모험주의노선을 시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간 체제의 공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시기를 앞당기는 조짐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이 현단계 대남전략에서 “민족해방과업”수행에 중점을 두고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광주 인민봉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남조선사회변혁운동사에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우리사회내부에서 태동된 일부 반미의식에 고무되어 편승·악용하려는 것이라고는 하나, 그 근본적인 배경은 반미투쟁과 관련된 우리 국내상황의 호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평화적 전도”에 의한 한국사회의 사회주의화가 난망시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남조선사회의 변혁을 추구해야 하는 북한으로서 반미민족해방투쟁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 방법 밖에는 그들 체제의 존립기반인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하나의 조선”논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는 처지인 것이다.

또 이러한 전략방침은 특히 남조선사회에 대한 성격규정의 변경조치에도 불구하고 현 북한의 내외적 혁명역량과 주객관적 혁명정세상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남전략의 정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서 불가피하게 택한 이른바 전략 자체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성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택한 공여지책적 성격의 대남전략방침이 통일의 “비평화적 전도”를 겨냥하고 있으면서 김정일정권이 남북한관계에 임해 나아가는 기본전략으로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우리가 소홀하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은 이번 “남조선사회변혁운동”이론에서 중심논리로 부각시킨 “자주성”의 문제로서, 북한이 남북한관계의 이론을 정립하면서 우리에게 앞서 보편적 가치이자 상징성이 강한 “자주성”의 개념을 선점하여 원용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물론 나아가 이를 전략이론에 적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 하나의 큰 강점으로 된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강력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하나의 조선”논리 못지않게 심리적 홍보효과가 다대할 수 있으므로 대남 심리홍보전 수행의 주무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 앞으로 북한이 대남전략이론을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조정하는 준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전략개념과 전략수행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한반도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서 중심현안이 되어 있는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평가해 본다.

북한은 현재 무엇보다도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민족해방변혁과제”의 우선수행이라는 전략방침에 따라 우리측과의 상대를 기피하는 한편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내세운 미국과의 직접협상 실현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측으로부터 4자회담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4자회담의 형식과 내용이 공히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우선 형식면에서 중국이 우리한국과 더불어 한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다. 북한이 한반도평화문제를 미국하고만 상대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대한안보지원 차단이라고 하겠으나 형식면에서는 남조선변혁운동이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민지정권이 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한반도에서의 정통성문제는 남북한간에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역량상의 우열여부를 떠나 그 주체 내지 주도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른바 북한의 “하나의 조선”전략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다. 남북한간의 정통성 경쟁에 있어 현재 북한으로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 김일성이 사망하여 없고, 국가권력을 부자간에 세습한 데다가 한국의 현 정부 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이 더욱 절실한 처지이다.

따라서 한국이 한 당사자로 되어 있는 4자회담을 결코 수락할 수가 없으나, 또 하나의 “제3자”는 다른 국가가 아닌 그들 동맹국이자 정전협정 체결당사국인 중국이며, 중국 또한 4자회담제안을 반대하지 않고 있어 북한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중국의 반대만 유도해 낸다면 거부할 수 있겠으나 중국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리 없어 북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회담의 내용으로 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것” 역시 선뜻 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북한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남조선변혁운동이 우선을 두어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민족해방변혁과제의 진전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전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체제유지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그 필요성은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현재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북한이 굳이 지금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아감으로써 체제붕괴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풀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남조선사회변혁운동”노선의 현실과 배치된 허구성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현재 북한은 그들 자신이 성사될 수 없을 것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선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후 남북한간 불가침기본합의서 이행”의 방침을 갖고 4자회담에 대응하는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북한은 그들의 대남전략노선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으로 변경시키고 종래의 “남조선혁명”을 현재 “남조선사회변혁운동”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로써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은 “남조선혁명”이 아니라 “남조선사회변혁운동”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남조선사회변혁운동”노선에 입각하여 현재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막다른 전략환경과 이에 따른 전략대안부재의 입장에서 최후의 대결적 노선을 시도하여 군사문제를 위요한 남북한과 미국간의 현관계를 타파하는데 주안을 두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최후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군사적 방법을 겨냥한 대남전략노선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남조선변혁운동의 방향은 군사적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마련과 환경조성에 집중될 것이고 그 1차적인 목표는 한·미간안보협력관계의 차단인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이미 구축해 놓은 1:1의 직접적인 협상통로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대남정통성 주장의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심분 활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남면에서는 “민족자주”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사회내부의 노동계, 학원,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대중투쟁을 확산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변혁역량을 보호 육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민족대통일전선 형성에 진력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세력구도를 「통일 애국세력 대 분열 매

국세력」의 구도로 유도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중투쟁에 대해 변혁역량의 “장성 강화” 및 통일전선의 “형성과 공고화”를 기하는 “기본담보”라는 전략관점 아래 변혁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관건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 북한의 “남조선사회변혁운동”노선과 관련하여 우리 대북전략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군사위주의 독자성있는 안보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일전불사의 국민적 각오를 고취시켜 나가야 하겠다.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운동이론이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해 목적의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이와같이 그릇된 관점에 기초하여 정립된 것이므로 전략구조 자체가 필연적으로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따라서 대북전략수행의 행태면에서는 북한대남전략에의 대응차원을 탈피하고 우리의 대북전략을 위주로하여 일방적인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전략구조 자체가 한국사회의 현실과는 괴리된 허구성을 띠고 있는데다가 김정일의 통치행태가 “통 크고 대담한 작전”식을 선호함에 따라 무모성을 내포하고 있어 대남정책방향의 비상식성과 불가예측성이 증대될 추세이므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의 대응역량 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하겠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북한이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으면서 새로운 대남전략노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하여 통일의 방법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확고히 정립하고 이러한 바탕에서 대북전략방향을 다시 가다듬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1국1체제의 통일을 유일한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통일의 방법으로 흡수식통일 이외의 대안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는 한 더욱 그러하다. 단지 흡수식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는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나 자체붕괴 등 여러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흡

수통일의 가능성 여부와 그 시기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역량의 상대적 격차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량이 북한의 역량을 압도할 때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시각 역시 이와 같은 사리와 북한의 대남전략현실에 맞도록 협조적 동반자로서 보다는 경쟁과 대결의 상대로 그 기본을 설정하여 主경쟁과 대결·從협력과 화해의 대상으로 이번 기회에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시각을 기초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체제통일의 기본전제가 되는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대북전략의 초점을 두고 국내여론을 결집시키면서 국제적 압력여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 대해 종래 우리의 국력우월성을 주입시켜 오던 단계에서 한차원 발전시켜 대남적대의식을 불식시키고 동포의식을 주지시키는 단계로 진입하여 주민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면서 대남의 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해 나가야 한다.

우리 대북정책의 1차적인 목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와 북한태도의 변화이다. 변화와 발전의 원리로 동양 주역(周易)의 궁극변(窮則變)과 서양 변증법의 정반합(正反合)이 통용되고 있다.

“남조선사회변혁운동”노선이 지닌 전략구조의 허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남조선 사회의 성격-

1.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식민지 사회

〈정치적 현실면〉

- 모든 정치권력은 미국에 의해 장악-실제적 주권자는 미국
- 남조선 정권은 대리정권·괴뢰정권
 - 정책을 자체로 규제(결정)치 못함
 - 독자적인 정책 집행권이 없음

〈경제생활 영역면〉

○해방 이후의 지배과정

- 적산이란 구실로 경제명맥 장악, 농지개혁 통해 봉건착취관계유지 및 잉여농산물 판매시장화
- 무상원조 간판하 재정 금융 장악 및 매관자본 육성
- 60년대초 무상원조와 경제파탄정책 탈피, 유상원조와 경제개발정책 전개 ; 다국적기업에 의한 식민지화

○기본생산수단이 미국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과 매관자본에 의해 장악

○사회적 생산의 재생산과정이 심하게 대외의존

○산업구조의 심한 편파성

○가혹한 인민수탈과 착취체계

○농업 종속화, 지주제도 유지, 생산력 발전 저해, 수입개방 강요

〈군사적 강점〉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군사분야에서 더욱 뚜렷

- 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강점군이며 점령군

○종합적인 군사기지로서 식민지 군사기지의 전형적인 사례

- 전 영토가 미 군사기지로 조밀화
- 모든 군종·병종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구비

○군사지배권 완전 장악

- 군사적 지휘권 장악
- 모든 군사작전이 미군의 군사정보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계획·집행

○남조선을 무기한으로 강점 ; 무기한적인 주둔 및 기지설치

〈민족자주정신의 유린 말살〉

○현 남조선의 사회적 의식구조의 본질적 특징

- 사대굴종사상이 민족자주의식 유린

- 매국배족사상이 애국정신 모독
- 외래풍조가 민족 미풍양속 침식
- 민족자주의식이 유린되고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가 부식된 사회
 - 사대주의는 숭미·공미사상으로 나타남
 - ① 대미의존 사상
 - ②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 ③ 굴종사상(힘의 강대성에 대한 공포의식에서 발로)
- 반공의식이 활개치는 사회
 - 숭미 사대주의사상과 같이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나
 - 구체적인 작용내용은 상이
 - 사대주의 : 대미숭배와 굴종사상으로 발현
 - 반공의식 : 북반부의 사회제도와 인민들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발현
 - 매국배족사상이 애국사상을 모독하는 전도된 현실 초래
- 민족문화 말살, 제국주의 반동문화가 활개치는 사회
 - 언어(민족문화의 기본 요소, 민족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 :
 - “외국어를 빼면 조선어는 ‘을’ ‘를’ 같은 표현만 남는 형편”
 - 교육(민족문화의 중요 구성부분의 하나) : 식민지노예 교육
 - 문학예술 : 매국적·배족적·퇴폐적인 것이 주제
 - 미풍양속 : 미국식 생활 양식→부정부패·사기협잡·강도폭행

2. 예속적이고 병적인 자본주의 곧 반자본주의 사회

〈정치분야〉

- 정 권 : 미국에 의해 조작·교체·유지
- 권력구조 :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밀착된 정상적인 자본주의나라의 권력구조와는 달리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을 정점으로 하고 그밑에 쫓쫓권자와 예속독점자본가들이 앞잡이로 제휴
- 정치내용 :

- 외세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요구가 최우선시
-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유린이 주된 내용

〈경제분야〉

- 대미 예측적 성격의 체질화
 - 경제의 명줄을 미국 등 외래독점자본에 건 예측경제 : 자금, 자원, 기술, 설비 등
 - 미국의 군사부속물로 전략 : 군수산업 확장, 방대한 군사비
- 매관자본의 비대화와 민족산업의 파탄으로 기업활동 기형화
 - 매관자본의 축적은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 및 정치권력과의 결합을 통해 이룩
 - 문어발식 기업확장 및 족벌경영체제
- 노동환경 악화, 노동운동의 치열화로 노동대중과 독점세력간의 적대적 성격 치열화
- 농업경제의 봉건적 성격 지속 및 대미 종속적 성격 심화

〈군사분야〉

- 군사적 자주권과 방위력을 박탈당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사회로서의 구조와 면모를 못갖춤
- 이로부터 여타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없는 여러가지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질들이 제기
- 군사적 불구화
 - 작전지휘권 상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
 - 전영토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변
 - 예속적 고용병적 성격
 - 40년대 : 10월 인민항쟁등 애국투쟁 탄압
 - 50년대 : 동족반대 전쟁
 - 60년대 : 4월인민봉기 탄압, 군사구테타
 - 70년대 : 월남대리전 참가

• 80년대 : 광주시민 학살

3. 남조선은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

- 사회구조 전반이 예속화·식민지화 된 자본주의사회이며 사회운동과정
이 기형화·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 따라서 남조선 자본주의의 성격은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자본주의 곧
반자본주의
- 결국 남조선은 식민지 성격과 반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 식민지 성격과 반자본주의 성격은 독자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으면
서도 불가분리의 관계
 -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된 성격은 식민지 성격, 반자본주의 성
격은 식민지 성격에 의해 규제되는 부수적 성격

4. 남조선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사회발전과정상의 위상과 그 배경

- 식민지 반봉건사회로부터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은 하나의
질적 변화이나 상호 근친성을 띠고 있는 사회
- 식민지 반봉건사회발전의 합법칙적 로정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제
와 민주주의적 혁명의 과제를 해결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
민민주주의사회로 발전
- 따라서 남조선사회의 변화는 역사적 의도이며 자기발전의 우회로에로
진입

〈원 인〉

-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준비되지 못한 사정과 관련
- 미제가 식민지자본주의화 방침을 강행한 것과 관련

〈사회 위상〉

- 식민지 정치·경제·문화체계가 지배하고 거기에 반자본주의적 정치·경제·군사·문화체계가 수직종속적으로 유착된 독특한 사회체제
- 사회발전단계의 어느 독자적인 사회역사적 유형으로 될 수 없는 기형적 종속적인 사회체제
- 정치적 자주권이 유린되는 식민지라는 제약성 때문에 자기발전의 내재적 요인이 억제된 기형적인 자본주의-총체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유형에 속하는 특정한 사회체제

5. 현재의 변혁운동 정세 평가

○ 사회적 기반 양호

-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유린 당하고 국가주권에서 배제되는 사회 정치적 처지의 공통성
- 기본생산수단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처지의 공통성

○ 객관적 정세 좋게 발전 : 남조선 전역에서 변혁운동 시동

- 외세의 식민지적 약탈과 압력으로 경제적 위기 심화
- 근로자들의 생활개선 요구에 폭력으로 억압
-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 고조화

○ 변혁역량의 준비가 상응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